

미완의 진실...5·18 진상규명 본격화

이낙연 총리 “법률에 근거 진상조사위 조만간 구성”
국방부, 광주 방문 시민들 정서·요구사항 등 청취
“미공개 기무사 서류 등 모든 자료 충분히 공개할 것”

문재인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본격 나서고 있어 발표 명령자 등 그동안 밝혀오던 ‘5월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주목된다.
5·18 진상 규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는 국방부 등에 ‘5·18 진상 규명 지원단(가칭)’ 발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 등으로 80년 5·18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5월 광주의 진실

이 국민 통합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법률에 근거를 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겠지만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며 “그 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5·18 진상 규명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아직 국방부 등 정

부 내에 구체적인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기구나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광주시를 방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민들의 정서와 요구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매일 국무조정실에서 점검과 조정에 나서고 있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과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초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만나 국정과제인 5·18 진상 규명과 관련, 국회에서의 특별법 처리 등과 맞물려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 처리 상황 등을 보며, 진상 규명을 추진할 기구나 조직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그동안 비공개 됐던 기무사(당시 보안사) 5·18 관련 자료의 전격적인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18 진상 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정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기총소사 탄환.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2036년부터 가구수 줄어들고 전남 2045년 가구원수 2명 이하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1년 정점을 찍지만,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43년까지 늘어난 뒤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은 2023년부터, 광주와 대구는 2036년부터 그리고 부산과 울산은 2037년부터 각각 가구수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원과 전남, 경북, 충북 등 4개 시도는 2045년 평균 가구원수가 2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2015~2045년 시도별 장래가구추계를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1901만3000가구로 2020년(2017만4000가구) 2000만가구를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2101만4000가구, 2035년 2206만7000가구에 이어 2043년 2234만1000가구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45년에는 2231만8000가구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보다 가구수 정점이 12년가량 후에 오는 셈이다.

2045년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가구수는 2015년 대비 늘어나지만 가구수 정점은 이보다 앞서 찾아온다. 서울은 가장 빠른 2022년 379만7000

가구를 정점으로 2023년부터 가구수가 감소한다.

광주와 대구는 2035년(62만3000, 98만6000), 부산과 울산은 2036년(142만4000, 47만4000), 경기와 경남은 2042년(563만8000, 147만4000) 각각 가구수 정점을 맞는다.

전국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15년 2.53명 수준이지만 점차 감소해 2045년 2.1명까지 줄어든다. 2015년 평균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2.67명)였고, 전남·강원·경북이 2.36명으로 가장 적었다.

2045년에는 세종이 평균 2.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강원(1.89명)이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 외에도 전남과 경북, 충북 등이 2045년 평균 가구원수가 2명 미만인 될 전망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평균 가구원수가 2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혼자 사는 가구가 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부부+자녀’ 가구가 적어지는 데다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거나 사별하면서 1인 가구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윤장현 광주시장과 ‘5·18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는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5·18 당시 공군 조종사의 ‘전투기 폭탄 장착 출격대기’ 증언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숨은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흉상 세운다 전두환 신군부 발표 명령 거부 경찰청 “장소 협의...10월 제막”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표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 추모 흉상이 세워진다. 그의 손자에게는 5·18평화장학금이 수여됐다.
경찰청은 “최근 관련 회의를 거쳐 안 경무관 흉상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안 경무관 유족 및 그의 생전 근무처였던 전남청과 협의해 설치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흉상 제막은 올해 경찰의 날(10월21일) 즈음이 될 예정이다.
안 경무관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표하라는 전두환 신군



故 안병하 경무관

부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또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의 부상자 치료와 음식 등 편의도 제공했다. 그는 이 일로 직위해제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당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안 경무관의 병원비로 퇴직금을 다 쓰고 집

까지 내놓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이후 다행히 지난 1994년 5·18보상금 1억1000만원과 2010년 9월부터 보훈급여금(월 130여만원)을 받게 됐으나, 감사원에서 이를 ‘이중보상’이라고 지적하고 보상금 환수통지 처분까지 내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7년째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고 안병하 경무관의 셋째 아들인 안호재(58)씨는 “경찰청에서 아버지의 흉상을 제작한다고 알려고 고맙다”면서 “이번 흉상제막을 계기로 5·18 때 광주시민들 먼저 생각했던 아버지의 정신이 경찰발전의 마

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 21일 안호재씨의 아들 상진(경기도 정발고 3년)군에게 5·18평화장학금(50만원)을 수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호남의 새로운 하늘길!

에어필립(주)

50인승 소형항공기

국내·외 취항 날개펴다!

인천·광주·전남지역을 항공허브로 하는 생활밀착형 항공노선 구축

▶노선 운항 계획

광주-인천 / 광주-김해 / 광주-양양
광주-제주 / 광주-김포